

## 제199호 (2009. 3. 23)

---

### ■ 속보/위기의 건설업

- 올 국내건설 수주, 전년 대비 2.7% 감소한 116.8조원 전망

### ■ 정책.경영

- 민자 유치 부족하면 뉴딜사업 실패 가능성 커져
-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3. 15) 평가

### ■ 건설 정보

- 세계 녹색 에너지와 빌딩시장 동향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건설산업 녹색화로 삶의 가치 향상을

## 올 국내건설 수주, 전년 대비 2.7% 감소한 116.8조원 전망

- 토목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및 건축수주의 극심한 부진으로 2년 연속 감소 불가피 -

- 2009년 국내건설 수주는 공공 및 토목수주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및 건축수주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116.8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해 2년 연속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건설수주의 감소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수주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문별로는 우선 공공건설 수주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SOC 투자 증가와 행복/혁신도시 건설 지속, 공공주택 수주 호조 지속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1% 증가함으로써 2008년(12.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sup>1)</sup>.
  - 특히 공공 토목수주는 SOC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 및 공공기관의 투자규모 증가(전년비 약 10조원 이상 증가), 지자체 투자 등으로 전년비 약 50%의 증가가 전망됨.
  - 공공 건축수주 역시 2기 신도시 공급물량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요 국책사업 택지내 주택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공공 주거용 건축수주의 지속적인 호조, 정부 및 주요 공기업 예산 증가, 행복도시의 관공서 건축공사 발주 증가 등으로 공공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전년에 이어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반면, 민간 부문은 16만호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과 국내 경기침체 가속화로 2009년에도 주택수요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 주택수주가 2008년에 이어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급격히 위축되어 민간 부문 전체적으로는 2008년 대비 2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신규 택지 공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미분양 주택이 16만호를 넘어섰으며, 국내 경제침체 가속화로 당분간 주택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에 전년 대비 30.2%나 급감한 민간 주택수주는 2009년에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1) 공공건설 수주 전망치는 올해 공공부문이 의욕적인 발주계획대로 대부분 발주를 집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으로 만약 공공부문의 의욕적인 발주계획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공공건설 수주는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그러나, 예년에 비해 올해는 공공부문이 조기 발주를 집행하고 있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부분의 계획대로 발주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기존에 추진되던 수도권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부가 수주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 주택수주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저지할 전망이다.
  -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점이 조합설립 이후임을 감안할 때 수주증가 효과는 2010년으로 분산될 전망이며,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역세권 개발 등 도심지 고밀도복합개발 사업 등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2009년 국내건설 수주의 큰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지속 및 PF 대출 어려움 등으로 올해도 민간택지 확보와 공공 택지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2010년 민간 주택수주도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외에는 활성화되기 어려워 2007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또한, 2009년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도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공중별로는 토목수주가 전년 대비 25.0% 증가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주거용 건축수주가 17.7% 감소하고,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16.5% 감소하여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29.5	14.3	22.8	37.1	17.4	24.4	41.8	54.4
민간	77.8	41.6	49.2	90.8	37.7	40.6	78.2	62.4
토목	28.4	16.2	20.0	36.2	14.9	26.3	41.3	51.5
건축	78.9	39.7	52.0	91.7	40.2	38.6	78.8	65.3
주거	53.3	25.6	32.5	58.1	23.6	21.0	44.7	36.8
비주거	25.6	14.1	19.4	33.6	16.6	17.6	34.2	28.5
계	107.3	55.9	72.0	127.9	55.1	65.0	120.1	116.8
증감률 (% , 전년동기비)								
공공	-7.2	20.5	29.1	25.6	22.1	7.0	12.8	30.1
민간	15.2	25.2	10.4	16.7	-9.4	-17.6	-13.9	-20.3
토목	-6.6	43.6	16.9	27.5	-7.6	31.4	14.0	25.0
건축	14.4	17.4	15.3	16.2	1.1	-25.7	-14.1	-17.2
주거	23.9	18.9	2.5	9.1	-7.8	-35.3	-23.2	-17.7
비주거	-1.2	14.9	45.5	30.8	17.3	-9.5	1.8	-16.5
계	8.0	24.0	15.7	19.2	-1.4	-9.8	-6.1	-2.7

주 : 200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이홍일 연구위원·박철한 연구원

## 민자 유치 부족하면 뉴딜사업 실패 가능성 커져

- 민자 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돼 -

-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 뉴딜사업, 10대 뉴딜사업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들 사업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을 기초해볼 때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임.
  -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에 걸쳐 정부가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대규모 SOC 투자 사업들은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경인운하사업 등인데,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만 해도 향후 5년 동안 1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운하사업 및 일부 10대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향후 5년 동안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함.
-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에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재정을 총 67.8조원 투입하고, 민간 자본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25조원, 녹색뉴딜사업에 7.2조원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국가 재정 및 공기업 투자로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자본을 25조원 유치하되 선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 2009~2012년 동안 총 투자금액 50조원이 투입될 녹색뉴딜사업은 42.8조원을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7.2조원은 민간자본으로 진행할 계획임.
- 그러나, 공공 부문의 재정 건전성, 경기 회복시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에 70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정부에서는 30대 선도프로젝트, 경인운하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6%나 증가(약 5조원 증액)된 정부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분야 공공기관도 전년 대비 17.5%나 증가(약 6조원 증액)된 투자 계획을 수립했음.
  -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올해 수준의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야 하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별 증액된 예산을 향후 2, 3년 후 경기 상승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임.

- 정부가 향후 5년간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에 투입을 계획한 민자는 32.2조원이고, 일부 10대 뉴딜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향후 투입이 필요한 민간 자본은 40조원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향후 재정투자가 계획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민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임. 그러나, 현행 민자 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로서는 이 정도 규모의 민자를 적기에 유치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 민자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해지시 지급금 확대, 금융 약정 개선책 마련, 기술위주 평가체계 도입, 부대사업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 폐지, 품질/기능 위주의 민자 협상 지침 제정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최소수익보장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성도 제기됨.
  - 또한, 국내 경기침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유동성 부족 현상은 향후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에서도 PF 대출 및 투자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다 대주단협약에 가입된 건설업체의 경우 신규 PF 대출에 제약이 많아 당분간 민자 사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PF는 매우 어려울 것임.
-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SOC 사업 자체의 투자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할 때도 민자 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 사업에는 기존에 이미 계획된 사업도 다수 있지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데,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다소 미흡해 완공 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일부 있음.
  - 따라서, 민자 유치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규모를 증대시킬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적기에 모두 획득할 수 있어 정부의 의욕적인 일정 계획 달성, 조기 완공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대, 투자 대비 효과성 증대, 기업의 매출 및 수익 증대 등이 모두 가능한 Win-Win의 결과를 낼 수 있음.
- 결국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일정 계획 달성, 편익 제고 등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민자 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충분한 민간 자본 유치가 관건임. 민자 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없을 경우 MB정부가 추진하는 다수 SOC 사업의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큼.

이홍일 연구위원(hilee@cerik.re.kr)

##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3.15) 평가

### ■ 기획재정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후속 세제 개편안 발표

-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의지를 표명
  - 이 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 개편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세제 개편안을 제시
  - 비상 경제 상황에 따라 연중 「상시 세제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적기에 적절한 세제 지원을 약속
  - 이번 세제 개편안의 중점 지원 분야는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외화 유동성 확충’,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임.

※ 이러한 세제 지원 체제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요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음. 일본은 자국 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올 재팬(all Japan)’ 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중. 이 중 증여세 일시적 면제 등 다양한 세제감면 조치가 제안된 바 있음(2009. 3.18,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 특파원 보도자료 중)

### ■ 부동산시장 정상화,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재외동포 등의 주택취득 활성화로 외환유동성 확충

- 그 동안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 적용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와 30% 추가 과세하던 것을 법인세만 부과, 기업의 원활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중과(60%)제도 역시 기본세율로 전환, 과중한 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의 주택 및 토지매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계속 배제됨.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양도세 한시적 감면대상을 신축 주택에서 기존 주택으로 확대, 미분양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2009. 3. 16~2010. 2. 11까지 취득하는 주택)

- 미분양 주택에 이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 부여
- 미분양 펀드 활성화와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국내 비거주자의 미분양 펀드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2009. 3. 16~2009. 12. 31까지 펀드 가입, 2012. 12. 31까지 지급 받은 배당소득)

####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로서는 적절, 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

-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는 구조조정에 당면한 기업들의 보유 자산 처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긴급하게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의 위축, 양도세 부담으로 매수자를 구하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처분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세제 정상화 취지에는 부합되나, 기존의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의 매입 혜택과의 차별성이 적어 미분양 해소에는 오히려 역작용이 예상됨.
  - 신축 주택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큰 기존 주택의 매수요인이 커져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 예상
  - 해외교포 및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임대 수요가 높은 편인 도심의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높을 것이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기존 주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주택시장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재고주택시장 거래에 숨통,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으로의 이동 활성화 유도 필요

- 재고주택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상대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상속 및 증여세 감면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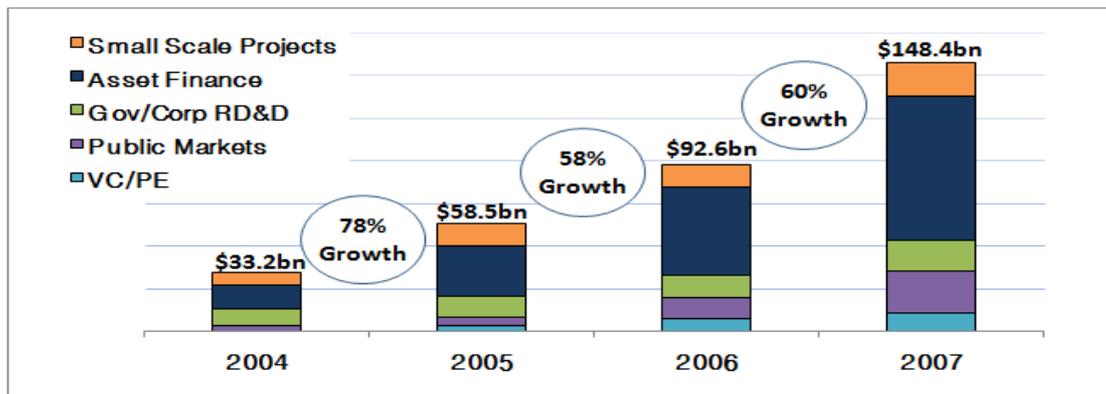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 세계 녹색 에너지와 빌딩시장 동향

### ■ 세계 녹색 에너지 투자 시장, 지난 3년간 연평균 60% 이상 성장

- 2007년 기준 1,484억 달러 투자 시장으로 급성장
  - 투자액에는 기술개발, 건설투자, M&A,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액 포함
- 가장 큰 비중은 신규 건설을 포함한 시설 투자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

전 세계 녹색에너지 투자 추이



용어 설명 : - Asset Finance :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자본 합계(시설투자의 성격이 강함)  
 - Gov/Corp RD&D : 정부와 민간기업의 R&DD(Research Development & Deployment) 투자 합계  
 - Public Markets : 에너지 기술 및 발전 상장회사의 공식적인 투자 합계  
 - VC/PE : 투기자본(Venture Capital)과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합계

자료 :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Energy Investment 2008, UNEP & New Energy Finance, 2008, p11

### ■ 풍력, 에너지원별 신규 투자 가운데 지속적으로 큰 비중(43%) 차지

- 다음으로 태양 및 바이오 연료 순으로 집계되며, 시설투자과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임.
  - 시설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태양과 바이오 연료 시설이 급증
- 권역별로 유럽과 중국의 최근 성장이 두드러지며, 미국 역시 상당한 규모를 차지
  - 신흥개발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R&D 투자도 급증하여 2007년 기준 167억 달러가 투자됨.
  - 유럽, 중동, 미국은 기업 R&D가, 아시아권은 국가 R&D의 비중이 높음.
  - 미국과 유럽은 녹색 에너지 인큐베이터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녹색 에너지 생산부문의 가치 사슬(value chain) 계열화를 위한 기업간 M&A도 활발

■ 녹색 빌딩은 미국과 유럽시장이 중심

- 미국 시장은 현재 약 1,400억 달러 시장으로 추산되며,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가 큼.
  - 2010년에 들어서면 2,700억~3,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예상
- 유럽 시장은 현재 180억 달러 수준으로 2010년에는 400억~700억 달러 시장 가능

미국과 유럽의 녹색빌딩 시장 전망

구분	Current(2006)	2010 Projection
U.S. Market	\$12 Billion(New) \$130 Billion(Renovation)	\$30 ~ 60 Billion(New) \$240 Billion(Renovation)
Commercial & Institutional	\$4 Billion(New)	\$10 ~ 20 Billion(New)
Residential	\$8 Billion(New)	\$20 ~ 40 Billion(New)
European Union	\$18 Billion	\$40 ~ 70 Billion(New)

자료 : Key Trends in the European and U.S. Construction Marketplace, SmartMarket Report, McGraw Hill Construction, 2008, 1, p26

■ 2013년 : 추진 프로젝트의 최소 16% 이상이 그린빌딩으로 추진 예상

- 미국, 유럽 지역 이외에도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급성장 예상
  - 관련 전문가 700명(45개국)이 설문을 통해 전망한 것으로 60% 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매우 높았음.
- 미국 건설업계는 녹색빌딩 상품은 주택 및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
-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그린빌딩 건설에 소요되는 초과 비용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책과 제도 지원의 부족, 전문가 부족 등도 지적됨.
- 실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유/무형의 성과가 다양하게 제시됨.
  -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쓰레기 등에 대한 당초 목표한 성과 외에도 고용창출, 건물의 가치상승, 임대비율 증가, 사용자 건강 향상, 성취도 향상 등이 보고됨.

■ 초기 성장 단계로 국내 건설산업과 기업에 충분한 기회 제공 가능

- 내수보다는 전세계적인 수요와 공동 대응전략에서 유도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임.
-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

최석인(연구위원, sichoi@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16	국회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예산정책처 자문회의에 왕세종 건설정책연구실장 자문 참여</li> <li>BTL 민자사업의 평가계획서 관련한 예산부문에 대한 정책 자문 수행</li> </ul>
3.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자문회의에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관련 자문</li> </ul>

■ 연구결과물 발간

발간유형	제목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세계 녹색건설시장 동향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 건설시장은 내수보다는 세계적인 정책 수요 및 공동 대응전략에서 유도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해야 함.</li> <li>선 수요 후 공급하는 구조보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큼.</li> <li>녹색 건설상품과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산업 및 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li> </ul>

■ 기타 연구원 활동

- 청주 CBS 라디오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인터뷰
  - 3.13(금) CBS 청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해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터뷰
- 금주 세미나 3건 개최
  - 3.19(목), 「글로벌 녹색성장 정책과 건설산업의 위기」 세미나 : 녹색성장과 건설산업 (3개 주제), 녹색건설 사례와 제안(2건) 주제 발표
  - 3.18(수), 「주택시장 위기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 : 주산연과의 공동 세미나로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본 2009년 주택시장 위기진단」 (김현아 연구위원) 주제 발표
  - 3.17(화), 「4대강살리기사업 기대효과와 낙동강권역 사업 추진방향」 세미나 :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배경과 대구경북지역의 파급효과」 (권오현 연구위원) 주제 발표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교육 개설
  - 일정 및 장소 : 3.24(화) ~ 3.27(금), 총 4일간 32시간,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문의 : 교육팀(Tel.3441-0691, 3441-0671, 3441-0848)

## 건설산업 녹색화로 삶의 가치 향상을

녹색성장은 전세계가 관심을 가진 주제임에 틀림없다. 공통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접근방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 먼저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는 MB정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학계를 포함한 산업계는 녹색성장 관련 기술 개발을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일자리와 먹을거리의 창출, 즉 경제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은 탄소중립도시 혹은 녹색도시 등의 이름으로 행정 구역 내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재정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아 보인다. 탄소중립도시에 살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내놓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이 경제 가치에 치중된 반면 선진국들은 근본적으로 지구 생존 문제에 비중을 둔 인류 삶의 가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우선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의 체도를 강제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당연히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도 물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는 ‘제로 썸’ 게임으로 갈 수 있다. 즉, 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삶의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것도 선택의 문제지만 ‘제로 썸’ 게임보다 시간의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는 틀림없지만 시급성은 선택의 문제라는 뜻이다. 경제 가치와 삶의 가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삶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정책 전환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아부다비에 건설되고 있는 ‘탄소 제로’ 도시와 국내의 ‘탄소 중립’ 도시는 국제 시장에서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건설을 녹색도시와 무관한 파괴적 시각으로 폄하하고 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50%,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50%, 에너지 사용량의 40% 이상이 건설 생산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재 등 주로 첨단·신기술 등에 정책과 기술 개발 투자의 무게가 실려 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비중이 큰 건설산업을 녹색화시키는 데로 무게 중심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 미국이 건설산업을 첨단화시키는 국가전략을 선택했는지 이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헤럴드경제, 2009. 3. 17>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